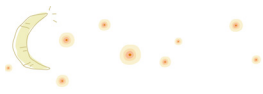




문화예술지원의 필요성과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이

1. 문화환경의 변화와 문화예술지원의 필요성
2. 공모지원사업과 문화정책의 목표
3. 후기 자본주의 하 문화예술의 상황과 문화예술지원의 필요성
4.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사회적 의미: 문화적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예술지원의 필요성과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문화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지구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다문화 융합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문화다양성이 보장되는 관용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대안적 흐름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다. 지구화의 가속화로 인해 인구의 국제적 이동이 증가하면서 국민국가(nation-state)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국가 간의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교류는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발전동력으로서의 문화의 역할은 증대하여, 지역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문화적 개발 내지는 문화적 발전 개념이 각광을 받고 있다. 21세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각 국민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각 국민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공모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하지만 경기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공모사업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술진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원된 사업이 전체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이 의도한 목적에 얼마만큼 근접해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사업 모니터링은 지원대상을 행정적으로 감시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원 대상이 된 각각의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얼마만큼 충실히 진행되어, 전체 지원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여 경기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모지원사업이 경기도의 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 보고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의 의미를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하여 경기문화재단의 예술진흥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언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1. 문화환경의 변화와 문화예술지원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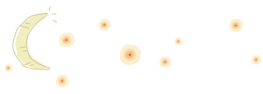
직접적으로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진흥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평가하기 이전에 우리는 문화예술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문화환경의 변화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문화환경의 변화를 파악해야 이를 토대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화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문화환경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1. 1 문화개념의 변화와 문화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문화예술의 위기 상황

문화 개념은 한편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금까지 문화는 경제, 정치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사회의 일부 영역으로만 취급되어 왔고, 문화는 경제 영역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영역으로 취급되어 왔었다. 하지만 최근 문화와 문화 이외의 영역, 즉 경제 영역과의 상호관계와 상호의존성은 강화되고 있다.

과거 인문적으로만 이해되던 문화와 달리 경제와 융합된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 혹은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은 21세기의 중요한 신성장산업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창조산업의 확산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문화산업/창조산업은 문화가 경제처럼 유용한 영역이며,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문화산업/창조산업의 확대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기도 하다. 즉 문화적 가치가 환금적 가치로 환원되어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문화예술은 긍정적이고,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문화예술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사회적 풍조가 등장한다. 이에 따라 순수기초예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문화예술의 응용영역에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이중적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그 어떤 사회영역에서보다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다. 한편으로 문화예술산업이 확장되면서 미술품경매시장에서 미술품에 대한 최고 가격은 갱신되고, 스타급 문화예술인들은 거대한 부를 획득하지만 동시에 최저 생계비에도 미



치지 못하는 경제적 소득을 올리는 문화예술인 또한 막대한 규모로 존재한다. 바로 이러한 문화적 상황의 변화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2 문화적 소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증대

경제적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사람들은 경제적 생존보다는 품위와 의미 등의 주관적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변화를 우리 사회도 경험하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회 층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수였다면, 최근 들어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풍요로움과 높음의 중요성만큼이나, 문화적인 생활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영위할 수 있느냐가 개인의 사회적인 삶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경향의 등장과도 맞물려있다.

이제 삶의 질은 얼마만큼 문화예술을 향유하는가의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정도로 문화적 소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매우 크다. 하지만 문화예술에 대해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수요는 문화예술분야의 공급과 조우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한편에서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의 향유층과 괴리되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시민들은 문화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그렇기에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적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사회적으로 점차 증대하고 있는 문화적 소비에 대한 시민들의 증대된 욕구에 부합하는 공공정책인 것이다.

주5일제 근무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로 인해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근면을 중요시 여겼던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서 창조성을 중요시 여기는 후기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이동이 급격히 나타날 것이기에, 노동/생산중심의 정책에서 문화/여가 정책은 과거와 달리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가 주목한 두 가지 문화환경의 변화는 매우 모순적으로 작용한다. 문화의 산업화는 그 자체로 부정적 변화라 할 수 없지만, 문화의 산업화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면 기초문화예술은 위기에 처한다. 따라서 문화의 산업화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문화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정책과 더불어 일방적인 문화의 산업화에 의해 위협에 처한 기초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수립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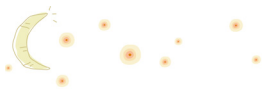
은 동시에 커진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매우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관계에 의해 창출된 문화예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공공적 채널을 통해 기초문화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문화예술공모지원사업은 최근 목격할 수 있는 모순적인 문화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화예술지원을 통해 급격한 상업화로 인해 위험상황에 처해있는 문화예술을 지원, 보호, 육성하고 그 결과 시민들의 급증한 문화적 소비욕구를 채울 수 있는 공공영역을 확대하려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최근 변화하고 있는 문화환경 속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사업은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2. 공모지원사업과 문화정책의 목표

공모지원사업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문화정책의 거시 목표와의 관계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지니는 문화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화정책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공모지원사업의 위상, 그리고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평가하는 기준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기초에 주목하고 문화정책의 변화된 기초 속에서 공모지원사업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의 의미를 평가하고자 한다.

문화정책(cultural policy)은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책으로 정책이 포괄하는 영역과 대상이 다른 공공정책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가변적인 특징을 지닌다. 이전까지 문화정책의 대상은 문화예술인에 국한되어 있었고, 문화정책의 최고 목표는 협의의 문화예술의 진흥이었다면, 최근 유네스코(UNESCO)를 비롯하여 각국의 문화정책의 목표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최근의 추이에 따르면 문화정책은 더 이상 협의의 문화예술인을 정책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최근의 문화정책의 추이에 따르면, 문화정책의 대상은 협의의 문화예술인에서 일반 시민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또한 문화정책이 다루는 영역 역시 협의의 문화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시민들이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문화정책을 “창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공공정책이며, 지역사회와 도시 또는 기업과 산업에 내재하는 문화자원을 재평가하고, 이러한 것들을 창조환경 속에 자리 잡도록 하는 정책”¹⁾이라는 정의는 문화정책의 대상과 영역을 확장된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도 문화정책을 “문화적 필요(cultural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식적 의도적으로 실행하는 일의 총체”²⁾라 파악하면서 문화정책의 대상영역을 매우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화정책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할수록 문화정책의 체계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화정책의 대상과 주체가 확장되면 문화정책이 추구하는 최고의 정책 목표는 추상화되고 구체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문화정책의 대상영역을 확장시키면 시킬수록 그와 동시에 문화정책의 체계를 수립하는 일이 급선무로 부각된다.

문화정책의 서열은 문화정책의 이념을 제시하는 철학-정책(policy)-프로그램-사업(project)으로 구성된다. 문화정책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철학-정책-프로그램 사이의 일관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계화된 문화정책이란 정책(policy)의 목표와 근거를 제시하는 ‘철학’을 필요로 한다. 문화정책의 체계적 철학이 없으면, 지원의 근거가 희박해지며, 이렇게 되면 ‘철학’ 없이 그때그때의 편이적인 목표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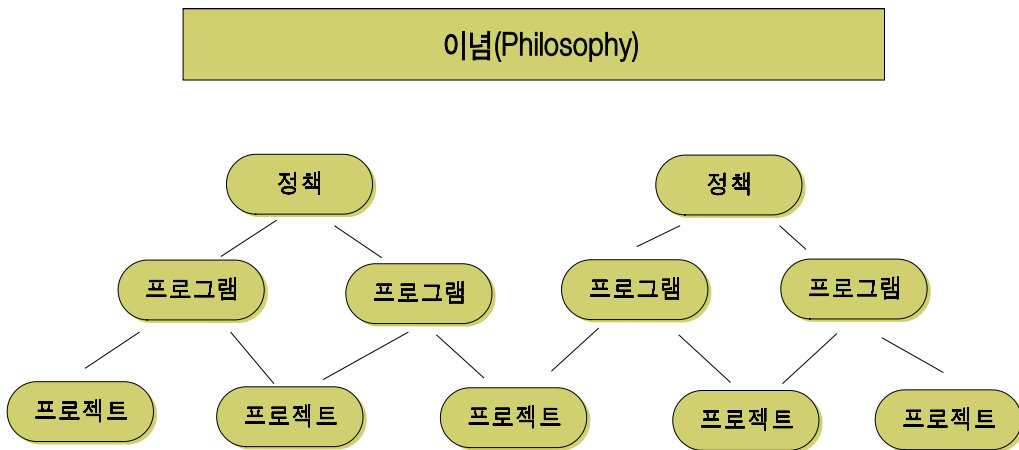


그림 1 문화정책의 서열

1) 이케가미 준, 『문화경제학』, 45쪽에서 재인용.

2) UNESCO, Cultural Policy: A Preliminary Study, 1969,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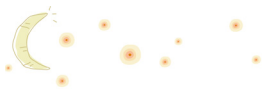


이러한 문화정책의 체계에 따라 파악해보자면 경기도가 지향하는 문화정책의 최고 목표는 이념(philosophy)이며, 이 이념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정책(policy)이 도출되며, 이 정책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 나타난 것이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과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는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위계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국가주의적 문화통제(policing culture)가 아닌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는 기본인권이자 보편적 인권에 속하기에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옹호하는 문화정책의 수혜대상은 문화예술인으로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전체 시민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가 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을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는 과정은 어디까지나 국가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보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정책은 개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화정책의 입안과 실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시민의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시장영역의 적극적인 협조와 책임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의 핵심인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보호를 시장 기능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 분야와 시민사회와 협치를 통한 공공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협치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이자, 국가의 위계질서에 의한 강제가 아닌 국가와 시민사회의 '수평적인 타협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을 의미한다.

현재 경기도는 과거 서울의 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수도권의 중심으로서 인구경제·사회·교육 등의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상황과 문화예술 분야를 둘러싼 내외의 환경 변화는 당연히 경기도 문화예술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은 경기도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요구와 변화된 욕망으로 표현되고 있다. 2007년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실시한 <문화예술향수실태조사>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예술을 관람할 때 도민들은 '관람비용의 적절성', '예술행사 내용 및 수준' 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지적했고, 문화예술 행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관람비용을 낮추면서도 동시에 작품의 질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다. 일견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는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적인 개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정책적인 개입은 지역적 구체성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경기도는 지역의 특성상 31개 시군이 상호 구별되는 문화적 욕구들을 가지고 있으며,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 또한 31개 시군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은 영화의 경우 거주시/군(51.8%)에서 관람하는 비율이 높지만, 연극, 미술, 클래식음악/오페라 등은 서울 등 경기도 외 지역에서 관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 지역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도내에서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안양시, 고양시는 거주 지역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반면, 남양주, 광명, 구리, 동두천, 의정부, 의왕, 하남, 포천, 평택은 서울/기타 지역에서 관람률이 4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지역민과의 '협치'의 관점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 공동체와 행사에의 참여 열망과 창작을 통한 자기실현 욕망의 구체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참여적인 시민사회에의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 실천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지역민과의 '협치' 과정을 통해 경기도민과 문화생산자의 문화예술 욕구들을 반영하는 새로운 문화예술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3. 후기 자본주의 하 문화예술의 상황과 문화예술지원의 필요성

3. 1 자율적 예술의 등장과 예술의 정당화 문제

현재 우리가 거창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취급하는 예술이란 단어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지칭하는 소박한 개념이었다. 현대사회에서 예술은 최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격상되었다. 예술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술이란 단어의 이러한 격상은 반가운 일이겠으나, 예술가는 예술 개념이 격상되면서 동시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 즉 예술/예술가는 정당성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예술은 명증한 개념이 아니라 가장 논쟁적인 개념이 되었다. 예술은 인정여부와 가치의 진정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논쟁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장(field)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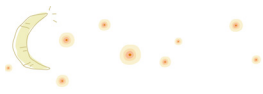
그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지만 사회적으로 최상의 지위를 차지하는 자율적 예술 개념이 등



장하기 이전, 예술은 분명 쓸모 있는 영역에 속했다. 라스코 동굴벽화는 감상을 위해 제작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동굴벽화는 당시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곳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산 속의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아마 이것은 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 마술의 힘과 관계있다. 현실과 현실의 이미지를 구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동굴 속에 소의 이미지를 그려 소를 주술로 동굴 안에 가두어두는 효과를 노렸을 것이다.

예술은 항상 주술과 결부되어 있었고, 우리가 예술이라 부르는 활동은 그렇기에 주술과의 관계에서 항상 쓸모 있는 행위였다. 또한 자율적 예술 개념이 생기기 이전에 현재 우리가 사제, 예언가, 시인, 역사가, 과학자, 예술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은 애초에는 동일한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예술가 또한 근대적 자율적 예술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구체적인 쓸모 있는 행위의 담지자였다. 자율적 예술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에 예술의 쓸모와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담론은 부재했다. 왜냐하면 예술 자체가 독립적인 행위, 자율적인 영역이 아니었기에 예술은 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수단에 불과한 예술은 반드시 어떠한 쓸모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율적 예술이 등장하기 이전 예술가는 전문직업적 노동자로서 노동자 개인의 자격으로 가신으로 고용되거나 위촉되었다.

예술가는 자율성 획득을 위한 오랜 투쟁을 통해 미성숙한 존재에서 자립할 수 있는 성숙한 존재로 탈바꿈하였으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예술이 제례와 의식에 결부되어있을 때 예술은 자신을 스스로 정당화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제례와 의식으로부터 예술이 단절되는 순간 예술은 자신을 정당화해야 했고,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고유한 질적 속성을 찾아내야 했다. 예술이 후견인 제도에서 판매와 인세 등의 시장적 관계에 의존하게 되면서 관권과 인세를 통해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판매되는 직접적 시장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적 경향이 등장했다. 시장을 위한 예술 활동이 생겨나면서 동시에 시장을 위한 예술 활동을 배척하는 경향이 등장했다. 이러한 경향은 실용품(object of utility)과 예술(object of art), 장인(craftsman)과 예술가(artist)를 엄격히 구별하는 사회적 용법을 등장시켰다.



3. 2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미학적 가치

예술이 자율성을 획득하기 이전 예술은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미학 담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예술은 자율성이 없는 현상이었기에, 항상 특정한 목적에 결부된 수단에 불과했다. 그랬기에 예술 자체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담론은 불필요 했다. 미학담론은 자율적 예술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야 발생한다. 이른바 심미주의 또한 근대적 자율적 예술개념이 등장하면서, 예술이 자신을 옹호하기 위한 정당화 담론의 일부로 등장했다. 예술의 자율성 개념을 옹호하기 위해 ‘예술을 위한 예술 (l'art pour l'art)’이라는 심미주의적 구호는 역사적으로 정당했다.

자율성 개념이 아직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이전, 사람들은 예술을 특정한 목적과 결부시켜 생각했고, 이러한 사회적 관습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예술을 위한 예술’, 즉 예술은 자신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지니지 않는다는 주장은 매우 급진적일 수 있었다. 하지만 심미주의의 한계는 예술이 자율성 개념을 사회적으로 승인 받고 난 직후 생겨난다. 예술은 힘든 과정을 통해 자율성 개념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예술이 자율성 개념을 인정받자마자 예술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예술의 난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술의 독자성, 예술의 고유한 속성을 강조하는 미학주의적 담론을 역사화 시키고 이외는 별도로 사회학적으로 예술을 취급하는 관점이 요구된다.

미학주의적 해석은 예술 현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마치 예술 내부의 법칙은 다른 사회 영역과 아무런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은 독립적인 법칙인 것처럼 과장하는 태도, 즉 미학주의로 귀착되기도 한다. 미학주의자들은 이른바 내재적 관점을 고집한다. 반면 사회학은 예술을 사회적 제도의 일부로 본다. 사회학적 해석에 따라 경우 미학주의적 예술 해석과는 달리 예술 또한 사회적 제도의 일부로 간주된다.

사회학주의적 도전은 미학 내부에 있는 아우타르키 모델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미학이 포함하고 있는 고급예술 편향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사회학적 해석에 따르면 예술의 가치는 늘 변해왔다. 따라서 예술사는 취미와 평가가 부침해온 역사이다. 어떤 것이 예술로 인정받는가의 문제는 사회적 요인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또한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간주되는 미적 판단은 학자, 지식인, 비평가들에 의한 사회적 판단에 불과하다. 흔히 예술의 가치의 저장고라고 언급되는 심미성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으로 구축된 범주이다. 이 범주는 형이상학적이 아니라, 자의적이다.



3. 3 예술의 자기 정당화와 예술에 대한 사회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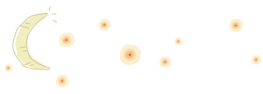
자본주의 사회에서 ‘쓸모(유용성)’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경제주의적 입장에서 경제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대상이나 인간은 ‘쓸모’ 없는 것으로 판정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쓸모’는 어떤 것의 존재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쓸모’가 이러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근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쓸모(유용성)’는 다른 의미를 지녀왔다.

예술이 자율적 현상으로 등장하는 근대사회에서 유용성과 무용성에 대한 고대적 해석은 전도된다. 근대사회에서 경제적 유용성은 사물과 인간의 가치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경제적 유용성이 가치의 상위를 차지하는 근대사회에서 예술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예술은 근대사회에서 자신의 유용성을 입증하거나, 자신의 무용성을 정당화해야 한다. 경제적 유용성이 지배하는 근대사회에서 예술/예술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용성 강제에 반응하는 담론은 세 가지 형태이다.

첫 번째, 예술은 경제적 유용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예술 또한 경제적 유용성과 배치되지 않으며, 예술이 경제적 유용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예술은 경제적 유용성과 심미적 무용성을 모순적 대립으로 파악하고, 경제적 유용성에서 관찰되는 논리(경제적 논리)와 심미적 무용성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논리(심미적 논리)의 질적 차이를 강조하면서 스스로를 옹호할 수 있다. 세 번째, 예술은 본질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예술을 경제활동과 구별되는 별도의 활동으로 파악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다.

예술의 쓸모를 입증하는 담론은 현재 이른바 문화컨텐츠 담론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한다. 이 담론에 따르면 예술은 쓸모 있는 문화컨텐츠로 가공되면 얼마든지 자신의 쓸모를 입증할 수 있다. 이 담론에 따르면 예술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며, 예술에 내재되어 있는 쓸모의 가능성은 컨텐츠 가공에 의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 이 담론에 포섭되며 예술계는 예술을 스스로 문화컨텐츠의 ‘기초’라고 간주한다. 이른바 ‘기초예술’이라는 표현에는 이러한 발상이 담겨 있다. 이러한 담론에 따르면 예술가는 사회적 분업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예술가는 문화컨텐츠를 가공하는 사람과 일종의 사회적 분업관계에 놓여 있으며, 예술과 예술가는 또 다른 산업과 사회의 창조성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쓸모를 입증한다.

본질주의적 자율성 담론은 쓸모/유용성과 예술적 가치를 모순적 대립으로 파악한다. 자율성 미



학론에 따르면 유용성과 심미적인 것은 모순적 관계이다.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다. 예술은 유용성 세계의 피안에 놓여 있는 것이기에 가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의 가치는 유용성에 의해 측정될 수 없고 오히려 예술의 가치는 무용성에 있다. 자율성 미학론은 두 가지 형태로 변주된다. 자율성 미학론의 첫 번째 형태는 본질주의적 경향이다. 이 담론은 미학적 담론을 통해 예술의 본질을 규정하고, 다시 규정된 예술의 본질로부터 예술과 예술가를 정당화한다. 이 담론에 따르면 예술 세계(Art world)는 특정인들로 구성된 실체적 범주로 파악된다.

예술가는 예술이라는 실체적 활동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예술과 예술가는 사회에서 특별한 지위를 자동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 이 담론은 첫 번째 담론과 대립한다. 첫 번째 담론은 이 형태의 담론을 제물로 삼아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이 담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첫 번째 담론이야말로 속물적인 담론이라 폄하한다. 하지만 후기 산업사회에서 이렇게 변주된 담론은 사회적 설득력을 상실한다. 이미 예술품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는 사회적 관행은 자리 잡았고, 이른바 팔리는 예술과 팔리지 않는 예술사이의 경계 또한 확실하다. 이 담론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팔리지 않을수록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예술/예술가일수록 높은 경제적 가치를 부여받는다.

세 번째 유형의 예술 정당화 담론은 예술과 예술가의 형이상학적 지위를 고집하지 않고, 예술과 예술가의 지위를 끊임없이 변동이 펼쳐지는 지형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유형과 구별된다. 예술은 경제적 활동과 구별되는 활동이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은 두 가지이다. 삶의 필연성에 구속되어야 하는 삶의 방식이 있는가 하면, 삶의 필연성에 구속되지 않는 삶이 있다. 경제활동은 삶의 필연성에 구속되어야 하는 삶의 방식이다. 반면 예술은 삶의 필연성에 구속되지 않는 삶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예술은 '아름다운 것', 다시 말해 필수적이지도 않고 또 단순히 실용적이지도 않은 사물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공통점 때문에 자유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잠재태로 갖고 있다. 반면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구속되어 필요하고 유용한 것을 생산하는 노동은 예술활동과 달리 자유로운 활동일 수 없다.

두 번째 담론이 예술계를 사회속의 작은 또 다른 사회로 간주 하며, 작은 사회인 예술계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정당화를 꾀하는 것과는 달리 이 담론은 특정 유형의 활동으로 파악된 예술 개념이 예술계를 뛰어 넘어 사회적으로 확산됨을 지향한다. 예술은 그 자체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예술은 노동과 구별되는 활동의 특성을 얼마나 현실화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정당화될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담론은 예술과 예술가에 대해 총괄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이 담론은 항상 예술의 잠재태를 현실화시키는 긍정적인 예술과 그렇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술을 구분한다. 이 담론에 따르면 직업이 예술가라고 해서 반드시 예술적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예술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그대로 예술작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 담론에 따르면 예술가와 예술의 범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예술/예술가의 범주는 언제든 확장될 수 있다. 이 담론은 '삶의 미학화' 를 중심으로 예술을 정당화한다. 즉 경제적 유용성의 논리가 삶의 노예화/삶의 도구화를 지향하는 방향을 지칭한다면, 예술/예술가는 삶의 미학화를 지칭하는 방향을 지지할 때 사회적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이 담론은 예술과 예술가의 '쓸모' 를 묻기 보다는 존재의 미학화, 삶의 미학화, 사회의 미학화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존재의 미학화, 삶의 미학화, 사회의 미학화를 피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잠재성에 주목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직업으로서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보조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를 미학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4.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사회적 의미 : 문화적 사회안전망 구축

우리가 문화정책의 변화된 기조 속에서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위치시키면, 문화예술지원사업은 단순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내 문화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문화영역은 사회를 정치-경제-사회문화로 나누는 3분법에 따른 일부가 아니라,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을 매개하는 시민사회의 영역이다. 시장 속에서 개인은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는 사적 존재라면, 국가와 정치의 영역에서 개인은 공적 존재로 자리 잡는다. 문화 영역은 완전한 사적 개인과 완전한 공적 개인을 매개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문화정책은 보건정책, 청소년정책, 문화정책, 예술정책 등의 영역에 대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분절화 되어 있는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을 매개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정책이어야 한다. 문화정책은 시민의 '생활세계' 를 영역으로 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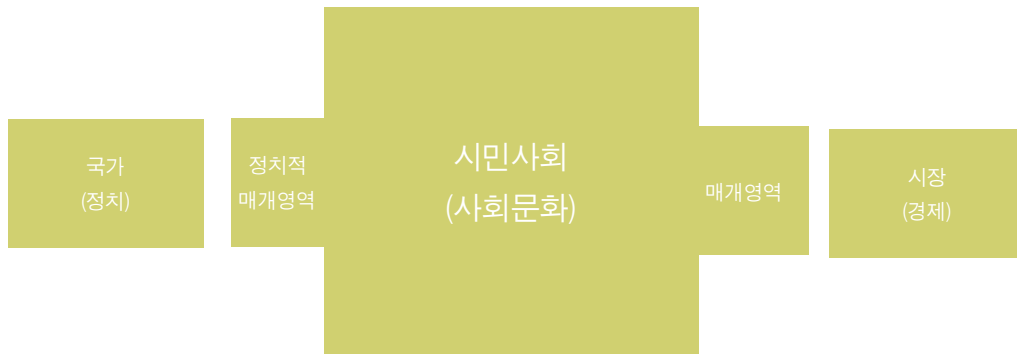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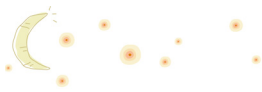


그림 2 정치 - 사회문화 - 경제의 관계

사적 영역의 소유권을 절대 양도할 수 없는 사적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획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경향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매개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렇기에 자유주의자는 경제정책 - 정치정책 - 사회문화정책의 관계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매개관계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관계로 바꾸어 놓고 경제를 선택한다. 자유주의자에게 사회문화정책은 경제정책, 정치정책에 종속되는 하위 정책영역에 불과하다. 시민사회는 배타적인 사적 권리가 공적 권리로 전환되어 사적인 것이 공적 논의의 중요 대상이 되는 매개영역이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의 주체적 재생산에 관하여 논의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은 시장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매개영역인 시민사회이다.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국가(정치)의 과대화에 시달려 왔고, 국가(정치)의 과대화는 민주화를 통해 정정되어야 할 독재 정치의 유산이었다. 하지만 국가(정치)의 과대화는 시장(경제)의 과대화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 과대화된 국가(정치)가 개인을 추상적인 공적 영역에만 머무르게 하는 국가주의적 유산과 관련이 있다면, 과대화된 시장(경제)은 또 다른 전체주의를 낳을 뿐이다. 단지 차이는 정치적 전체주의인가, 경제적 전체주의인가일 뿐이다.

중요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공적 정책입안자와 민간기업 사이의 스피드 문제는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민간 기업은 마케팅을 위해 사회문화적 변동을 이끌어내는 트렌드에 주목하고, 또한 동시에 마케팅을 위해 새로운 사회문화적 변동을 유발한다. 민간 기업에게 사회문화 변동을 유발하는 트렌드 읽기는 경제적 이윤창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민간 기업은 욕망의 트렌드를 매우 빨리 읽어낸다. 하지만 늘 정책입안자는 민간기업보다 사회문화변동의 트렌드를 읽어내는 속도가 느리다. 기업은 개인들의 욕망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절대적 요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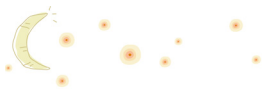


욕망의 흐름 파악은 바로 기업들의 마케팅 능력과 직결되며, 욕망의 흐름을 파악하는 기업만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입안자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사회문화변동을 유발하는 트렌드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트렌드 속에는 개인들의 미세한 욕망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며, 사람들은 사회문화정책의 효용을 거대 가치기 아니라 자신들을 얼마만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들의 욕망은 때로 충돌한다. 특정 계층의 욕망추구는 다른 계층에 속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욕망의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상호 충돌하는 욕망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욕망의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보다 더욱 중요하다. 공공정책과 기업 마케팅의 차이는 바로 그것이다. 기업은 욕망의 흐름만 파악하여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국가의 공공정책은 욕망의 흐름파악만으로 부족하다. 공공정책은 욕망을 조절하고 충돌하는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경제적 사회안전망은 국민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생존에 필수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구조에 불과하다. 생존에 필수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적 의미의 사회안전망으로는 현재 개인들이 생애주기에 처한 위험에 대한 공적 해법이 될 수 없다. 현재의 사회안전망은 국민들의 최소한의 경제적 생존을 충족시키는 목표를 지니고 있을 뿐인데, 주체의 재생산 과정에서 개인이 노출된 생애주기 단계의 각각의 위험은 최소한의 경제적 생존만으로는 극복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닌다. 경제양극화로 인해 형성된 생애주기별 위험의 양극화를 방지할 경우, 또는 소극적인 방식의 생존적 복지만 펼칠 경우 양극화 구조의 극복은 불가능하다. 현재의 사회안전망은 시장에서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할 뿐, 시장과 정치의 매개영역인 '생활세계'에서는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현재의 사회안전망은 시장의 경제주의가 낳는 위험에 대한 국가의 경제주의적 해법에 불과하다. 사회 안전망을 통해 보장되어야 할 것은 최소한의 경제적 생존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 실존 보장이다.

시장의 헤게모니 장악은 경제주의의 확산으로만 귀결되지 않는다. 시장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면 공적 영역에 관한 개인들의 관심을 차단시킨다. 시장이라는 사적 영역의 확산으로 인해 공적 영역이 축소되면서 출현한 사회란 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화폐의 추상적 관계망으로 인해 인간 사이의 추상적 결합이 이뤄지는 곳이다. 시장의 과대 확대는 개인들을 타인의 부채를 전제로 한 사적 개인으로 만들고 공적 영역을 말소시킨다. 공적 영역이 쇠퇴하면 인간과 인간이 시장의 관계로 축소되고 환원된다.



사회 안전망이 개인의 경제적 실존이 아니라 인간적 실존을 보장하는 안전망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 안전망의 경제주의적 태도를 견어내야 한다. 이러한 대안을 문화적 사회 안전망이라 부르고자 한다. 문화적 사회안전망은 국가는 최소한의 경제적 생존만을 보장하고 주체의 재생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사적 시장관계에 의존하는 시장주의를 청산하고, 주체의 재생산과 관련된 비용을 공적 영역에서 보장하는 안전망이다.

개인들은 생애주기 단계를 거치며 육아, 출산, 의료, 주택, 교육, 문화 등 주체의 재생산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로 한다. 현재 개인들은 주체형성과 관련된 제반 비용들을 사적인 시장에서 시장주의적 방법에 의해 지불한다. 시장에서 주체형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자본을 지닌 개인은 이 구조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나, 경제자본을 지니지 못한 개인은 이 재생산 메커니즘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재생산 메커니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구는 많아봐야 불과 최상위 20%뿐이라는 사실이다.

문화적 사회안전망이란 사회 구성원이 소득에 관계없이 주체의 자기계발의 가능성을 부여받은 사회안전망이다. 21세기가 '창조성'에 의해 지배되는 시기라 할 때 경제적 생존에만 관련된 사회 안전망으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개개인들에게 '창조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 기회의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21세기는 더욱더 20-80사회의 가능성이 농후해질 것이다. 문화향수가 인간의 창조성 계발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시장의존적 구조에서 문화향수는 폐쇄적인 회로에서 머물러 있다.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사람, 문화를 통해 자신이 창조성을 계발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고학력이나 중산층이자 활동이 가능 청년, 중년의 생애주기의 사람들이다. 문화의 창조성은 시민사회 전체 영역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이 특정 층으로 구성된 폐쇄회로 속에서 순환한다. 문화적 사회안전망은 현재의 문화향수의 폐쇄 회로를 차단하고, 문화의 창조성이 전 시민사회 영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세혈관을 만들어내야 한다.

창조성의 폐쇄적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생활세계 속에서 창조성을 발휘하고, 창조성을 계발할 수 있는 '생활권 문화기간망' 구축이 필요하다. 생활권 문화기간망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중대규모로 전문화된 문화기반시설과 달리 '생활권 문화기간망'은 복지, 문화예술, 체육, 여가 등 개인의 재생산에 필요한 제반 수요를 시장적 방법이 아닌 공적 방법으로 생활세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생활권 문화기간망'은 개인들에게는 재생산 비용을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여 재생산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동시에 사회적 일



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와 시민사회영역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낼 수 있다.

현재의 시장 의존적 재생산구조는 개인이 생애주기별로 등장하는 위험을 뛰어넘은 허들경기에 불과하다. 그 허들경기에서 허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한 고령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문화적 사회안전망은 세대간 순환구조 창출을 겨냥해야 한다. 고령인구에게는 사회 재귀프로그램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창출하고, 청년들에게는 노인에 대한 공적 서비스 종사로 인한 일자리 창출, 개인들에게는 고령인구를 부양하는 재생산 비용을 절감하도록 해 세대간 연대 구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문화예술지원사업은 바로 경기도 내에 문화적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결합해야 그 빛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